

# 호남 민심 행기는 국민의힘... '5·18 기념식' 전원 참석

보수 정당 의원 모두 참석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 제안으로 이뤄져  
이준석 대표 "국민 통합 차원"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보수 정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광주로 향하는 국민의힘 행보와 관련, 호남 민심 포용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제안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사까지 참석하는 만큼, 당 지도부도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요청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18민주

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18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기념식이 열릴 광주로 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수 정당 내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논란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

은 조금씩 달라졌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8년에도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9년은 다소 상황이 달랐다. 황교안 지도부 당시 5·18 망언 사태가 있었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있었다. 이후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5·18 망언 사태 및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사과했고, 당 지도부도 그해 기념식에 참석했다.

같은 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 자격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과거 논란에 대해 사죄의 뜻으로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도 꿇었다. 이후에도 당 지도부나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거나,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 언급을 빠뜨린 데 따른 비판 여론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라는 행동으로 '국민 통합'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이라며 "지역 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있는 호남 민심을 행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19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는 모습 자체가 그만큼 호남을 행기는 메시지로 읽힐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 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주요 단체와 당 지도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치 국가 당연한 책무”

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

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규모는 59조 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제외금 등 가용 재원 8조 1000억원과 금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21조 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24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한다.

또,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 2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실질 구매력 보안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尹 추경엔 공감... “협치는 유감”

“역대급 지인 내각” 비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 협조에 공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한 만큼, 여야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추경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희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는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제안한 데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직후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 자세를 보였다는

것에 있어 많은 기대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인 시정연설”이라며 “(시정연설 가운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예로 들며 여야 협치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묻어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대해 민주당은 공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1기 내 각 편성에 대해 특정 학교·지역·경력자 위주의 역대급 지인 내각이라고 비판한 뒤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 이재명 “이순신 장군도 13척으로 이겼다”

6·1 지방선거 승리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이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지선에서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 때는 (대선 이후 지선이) 1년 공백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제주,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이겼다. 이번에는

(공백이) 20일도 안 돼 치러지는 건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한다.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라며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을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포기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뉴스1

만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긴다”며 “심판만 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나. 맨날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를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